인문논총 82권 4호(2025. 11. 30.), pp. 77~125
[DOI] https://doi.org/10.17326/jhsnu.82.4.202511.77

19세기 말 서양 정치사상의 수용과 『태서신사람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착종과 이중변형을 중심으로

정종원*

초록 19세기 말 선교사와 중국 지식인으로 구성된 번역자들은 영국에서 나온 역사서인 『19세기』를 『태서신사람요』로 번역하였다. 이 과정은 서양 정치사상과 유교 정치사상 사이에 놓인 깊은 강을 건너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번역자들은 유교 정치사상에서 서양 정치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했다.

서양의 자유주의는 유교 정치사상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에 그 맥락이 대부분 누락되었다. 반면 번역자들은 서양의 민주주의와 유교 정치사상인 민본주의 사이의 접점을 발견하였다. 번역자들은 서양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보통선거제는 민심을 반영하고 하의상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변형했다. 반대로 민본주의 역시 민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역사적 경험을 민주주의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형되었다. 또한, 번역자들은 『19세기』의 자유주의 대 전제주의의 대결을 민본주의 대 반민본주의의 대결로 전환해서 서술했고, 이 과정에서 민본주의를 실현한 정치체제를 '민주'라고 호명했다. 번역자들의 작업은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착종되도록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변형되어 유교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며, 동시에 민본주의 사상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선거제)와 정치체제('민주')가 갖춰지는 이중변형을 겪게 되었다.

주제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본주의, 『19세기』, 『태서신사람요』

* 한양대학교 사학과 BK역사교육연구팀 연구조교수

1. 서론

중국은 1894년에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였다. 그 결과 영토를 잃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에 지불해야 했다. 이에 중국인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의 지성계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책이 바로 『태서신사람요』(泰西新史攬要)였다. 이 책은 영국 작가인 로버트 맥켄지(Robert Mackenzie, 1823-1881)가[1] 영국에서 출간한 『19세기』(*The 19th Century: A History*)(이하 '『19세기』')를 번역한 것이었다.[2] 중국 상해에 있었던 광학회의 영국인 개신교 선교사 티모시 리처드(Timothy Richard, 李提摩太, 1845-1919)와 중국인 학자 채이강(蔡爾康, 1852-?)은 3년여간 공동으로 『19세기』를 번역하여, 1894년에 그 내용의 일부를 『만국공보』(萬國公報)에 연재했으며, 청일전쟁이 중국의 패배로 끝난 직후인 1895년 5월에 『태서신사람요』라는 책으로 출간했다. 『태서신사람요』는 발간된 이래 3만 부나 인쇄되었으며, 수십 종에 이르는 해적판이 인쇄되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100만 부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1890년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태서신사람요』의 이러한 성공은 1898년에 벌어진 무술변법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태서신사람요』는 중국 학계에서 주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태서신사람요』의 원저인 『19세기』는 서양 역사학계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책이지만, 1880년에 초판이 출간

---

1 Sidney Lee (1893),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1885-1900*, Vol. 35, London: Smith, Elder & Co, p. 161.

2 『19세기』는 1880년에 초판이 나왔고, 이후 1909년까지 15개의 판본이 출판되었다. 이 연구는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이 번역작업을 시작한 1892년에서 가장 근접한 1891년의 13판(Thirteenth Edition)을 저본으로 하여 분석했다. 『태서신사람요』에서 1885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번역자들이 참고한 판본은 초판본이 아니라 1891년의 판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obert Mackenzie(1891), *The 19th Century: A History*, London, Edinburgh, and New York: THOMAS NELSON AND SONS].

된 이래 1909년에 15판이 나오는 등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있었던 책이었다.[3] 『태서신사람요』가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사회진화론의 영향으로 역사가 진화한다는 진화관을 담고 있어서, 당시 중국의 개혁파들의 사상과 부합했기 때문이라는 점,[4] 둘째, 서양의 근대화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었던 당시 중국 지성계의 수요와 맞아떨어졌다는 점,[5] 셋째, 번역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진행하여 중국의 수사법, 문법구조, 역사서술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6] 등이 지적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 『태서신사람요』가 엄청난 인기를 받고, 거대한 개혁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한국 학계에서의 연구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897년에 한국의 학부는 『태서신사람요』를 『태서신사』(泰西新史) 한문본과 『태서신사』 언역본으로 동시에 간행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학부가 발간한 『태서신사』의 내용을 처음으로 주목한 연구자는 노관범이었는데, 그는 『태서신사』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정치개혁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7] 이어서 허재영은 한국 학부에서 『태서신사람요』를 간행할 정도로 중시한 이유가 자주, 독립, 애국정신을 고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8]

---

3 姚彦琳(2021), 「晚清译著《泰西新史揽要》风行一时的原因探析」, 『文化创新比较研究』 33, p. 186.

4 郭蔚然(2016), 「《泰西新史揽要》译作的变通与重构」, 『史学理论与史学史学刊』 14, pp. 178-179; 姚彦琳(2021), pp. 187-188; 张昭军·徐娟(2005), 「文化传播与文化增殖-以《泰西新史揽要》在晚清社会的传播为例」, 『东方论坛』 2005年 第4期, pp. 67-68; 冯一下(2015), 「《泰西新史揽要》: 一部晚清历史教材传奇」, 『教育与教学研究』 第29卷 第9期, p. 3.

5 郭蔚然(2016), p. 181; 姚彦琳(2021), p. 187.

6 郭蔚然(2016), pp. 169-175; 汪芳(2012), 「《泰西新史揽要》翻译的本土化取向」, 『安徽文学』 2012年 第12期, pp. 36-38.

7 노관범(2000), 「1875~1904년 박은식의 주자학 이해와 교육자강론」, 『한국사론』 4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p. 127-128. 한편, 『태서신사람요』가 한국에서 재간행되는 과정과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유수진의 연구가 주목된다. 유수진(2012), 「대한제국기 『태서신사』 편찬과정과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허재영(2015),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

정종원은『태서신사』언역본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유교 정치사상인 민본주의가 매우 강조되었다는 점을 발견했다.[9] 후술하겠지만,『태서신사람요』에는 민본주의적 맥락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유교 지식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민본주의적 논리로 19세기 서양사에 나타난 정치사상을 풀어간 것이야말로『태서신사람요』가 당대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맥켄지가 서술한 책이 어떻게 민본주의 사상의 언어로 맥락화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은 동아시아에서 서양 정치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19세기 서양 정치사상과 유교 정치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당대 지식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대답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19세기』와『태서신사람요』의 여러 내용 중에 정치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고자 한다.[10] 이는 서양 정치사상이 유교 정치사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1차적 변형이『19세기』에서『태서신사람요』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11] 티모시 리처드와 채이강, 이 두 '번역자들'은 19세기 서양의 정치사상을 유교 지식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유교 정치사상의 여러 자원들을 끌어내어

연구』35, 한국독서학회, p. 249.

9 정종원(2024),「『태서신사』의 국제정치론과 신법론」,『상허학보』70, 상허학회, pp. 117-119.

10『태서신사람요』는 1895년에 출간된 원전을 찾지 못했고, 대신 2002년에 상해서점출판사(上海書店出版社)에서 간행한 판본을 구할 수 있었다. 이 판본은 1895년의 초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서 이후에 출간된 판본에 나온 구두점을 따왔고, 문자는 간자체로 간행한 것이다[李提摩太·蔡爾康譯(2002),『泰西新史攬要』,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p. 1-3]. 구두점과 간자체라는 차이점이 생기긴 했지만, 내용상의 변화는 없으므로 이 판본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11『태서신사람요』가 다시 한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2차적 변형은 후속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번역에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전달하려고 한 서양 정치사상의 변형과 서양 정치사상을 수용하는 틀이 된 유교의 민본주의 사상에서 일어난 변형을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19세기』와 그 번역서인 『태서신사람요』가 어떠한 맥락에서 작성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19세기 서양 정치사상의 흐름, 『19세기』에 나타난 서양 정치사상, 번역자들의 번역 맥락 등을 다룰 것이다. 이어서 3장에서는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이 유교 정치사상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누락과 삭제가 많이 일어났음을 밝히고 그 이유를 규명할 것이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이 유교 정치사상의 민본주의와 접목되어 번역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내용이 변형되어 수용되었으며, 동시에 민본주의 역시 변형되는, 착종과 이중변형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19세기 서양의 정치사상이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되는지는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서양의 해당 정치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느냐에 따라 갈라졌음을 규명할 것이다.

2. 『19세기』와 『태서신사람요』의 맥락

2.1. 19세기 서양의 정치사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20세기 이후 현대의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의무나 공공선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2] 그러나 19세기의 자유주의는 이와 사뭇 달랐다. '자유주의'의 원어인 리버럴리즘(liberalism)에는 사실 '자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리버티(liberty) 혹은 프리덤(freedom)이 포

12 헬레나 로젠블랫(2023), 김승진 역,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서울: 니케북스, pp. 375-378.

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래 '자유주의'라는 의미가 부여되기 이전의 리버럴(liberal)이라는 단어는 '편견이 없는' 혹은 '관대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자유주의를 뜻하는 단어가 자유를 의미하는 리버티나 프리덤이 아니라, 관대함 혹은 관후함을 의미하는 리버럴리티(liberality)에서 유래한 데에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었다.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특별한 덕성 혹은 덕목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개인들의 자유가 보존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대함과 관후함의 덕성, 즉 자유로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었다.[13] 19세기 자유주의는 애국, 자기희생, 공공선의 촉진을 가치로 가지고 있었고, 시민적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고 노력했으며, 도덕은 자유주의자들의 핵심적 목적이었다.[14]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공통점은 '리버럴한 원칙들'에 합의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 원칙들이란 법치와 공민적 평등을 지지하는 것, 입헌 정부와 대의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제반 권리들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정도를 제외하면 '리버럴한 원칙들'은 모호했다.[15]

19세기 전반기의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며, 보통선거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만큼의 지적 역량과 성품을 갖추려면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간, 재산의 보유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보았다.[16] 자유주의자들은 교육받지 못한 대중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유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만한 정치적 선택을 할지 확실치 않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소수의 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하

---

13 홍철기(2025), 「혁명 이후의 정치사상: 19세기 자유주의와 의회제」, 『서구지성사입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pp. 242-245.

14 헬레나 로젠블랫(2023), p. 376.

15 헬레나 로젠블랫(2023), p. 84.

16 헬레나 로젠블랫(2023), p. 127.

면 보통선거의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남성에 한정된) 보통선거 도입이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갔으며, 자유주의자들도 점차 '유보적'인 찬성 입장으로 선회해갔다.[17] 자유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았으나 그 추세가 불가피함을 인정했고, 민주주의를 길들여서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한 민주주의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은 대중을 교육하고 대중에게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었다.[18]

2.2. 『19세기』에 나타난 서양의 정치사상

그렇다면 이러한 19세기 자유주의의 흐름은 『태서신사람요』의 번역 대상이 되었던 『19세기』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을까.[19]

『19세기』에서는 자유를 매우 강조하였으며, 19세기 유럽사를 자유주의(Liberalism)와 절대주의(absolutism) 혹은 전제주의(despotism)의 대결로 묘사하였다.[20]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결을 강조하는 서술은 특히 입헌군주국인 사르데냐 왕국이 전제군주국들과의 대결 끝에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유는 전제주의를 몰아내거나, 전제주의에 의해 짓밟혀

---

17 홍철기(2025), p. 247.

18 헬레나 로젠블랫(2023), pp. 235-236.

19 이 글에서는 『태서신사람요』의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내용 변형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9세기』라는 책을 사상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물이 아닌 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면, 원저자인 로버트 맥켄지는 『19세기』의 초판본이 나온 1880년의 다음해인 1881년에 사망했다. 그런데 『태서신사람요』가 참조한 『19세기』의 1891년 판본에서는 1885년의 선거법 개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아마도 출판사에서 내용을 증보하여 계속 발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만약 맥켄지의 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1880년의 초판본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19세기』에서 『태서신사람요』로의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변형이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맥켄지라는 원저자를 분석하지 않고, 『태서신사람요』로 번역되는 원저인 1891년 판본의 『19세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20 Robert Mackenzie(1891), pp. 455-458.

야 했다."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절정에 달했다.[21] 『19세기』는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필연적인 대결과 해당 대결에서 자유주의의 승리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19세기 유럽사를 바라보았으며, 자유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19세기』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확고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에서는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백과전서』가 전제정치를 비판하고, 대의제와 자치정부(representation and self-government)를 옹호했다면서 긍정적으로 서술했다.[22] 또한, 19세기 초 영국의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가 너무 부패해서 대표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23] 『19세기』의 전반적인 서술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리버럴한 원칙들'의 핵심인 대의제 정부체제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19세기』는 보통선거 및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었을까. 『19세기』는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투표권 확대의 과정인 선거법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였다. 1832년의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를 출범시킨 위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평가했다.[24] 또한, 보편적인 투표권을 요구했던 차티스트 운동에 대해서는 그 방법이 과격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차티스트 운동이 주장했던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화되었다고 하면서 그 목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25] 이런 점을 볼 때, 『19세기』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저술이었지만, 민주주의가 점차 제도화되어가던 19세기 후반의 영국 상황을 반영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

---

21 Robert Mackenzie(1891), pp. 360-361. "Liberty must drive out the despotisms, or be crushed by them."

22 Robert Mackenzie(1891), pp. 14-15.

23 Robert Mackenzie(1891), pp. 99-101.

24 Robert Mackenzie(1891), pp. 109-110.

25 Robert Mackenzie(1891), pp. 156-157.

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유주의적 성향과 민주주의에 대한 친연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19세기』는 선거법 개혁과 함께 영국 정부가 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서술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지성과 원칙을 갖춘 인민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국가의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26] 『19세기』의 서술은 민주주의가 자유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세기』는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주류적인 사상이었던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경향도 보이는 역사서였다.

2.3.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는 상술한 바와 같이 티모시 리처드와 채이강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19세기』를 『태서신사람요』로 번역하였던 것일까?

티모시 리처드는 1845년에 태어나서 침례교의 교인이었던 부모님 밑에서 성장했고, 하버포드웨스트 침례교 대학(Haverfordwest Baptist College)에서 공부했다.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기독교 부흥운동으로 인해 영국의 많은 청년이 해외 선교활동에 참여했는데, 리처드도 그중 한 명이었다. 리처드는 1870년에 중국에 도착하여 선교활동에 나섰다. 그는 1874년부터 1875년에 걸쳐 「구세당연지리」(救世當然之理)라는 기사를 『만국공보』(萬國公報)에 장기간 연재했는데, 그 내용은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26 Robert Mackenzie(1891), pp. 148-149.

리처드는 당시 중국에 온 전형적인 유형의 선교사였다.[27]

리처드는 1876년부터 1878년까지 산동성 및 산서성의 기근에 맞서 구호활동을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는 『신보』(申報)와 『만국공보』를 통해 중국인들에게 재난 지역의 상황을 알리고, 구호활동을 위한 기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했다. 한편 그는 『노스 차이나 해럴드』(*North China Herald*), 『노스 차이나 데일리 뉴스』(*North China Daily News*)와 같은 영어 신문을 통해 재난지역의 상황을 보고했다. 중국인 독자들을 대상으로는 중국 지방정부의 도움을 칭찬했지만, 영어 독자들을 상대로는 중국 지방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리처드는 구호활동 과정에서 각 신문의 대상 독자를 인식하게 되었고, 다른 신문에 기사를 게재할 때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28]

기근 구호활동을 경험한 이후 리처드는 선교 활동을 재고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기독교를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자체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중국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 선교사만이 선교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9] 리처드는 1880년부터 중국의 관리와 지식인들에게 서양의 과학과 기술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이 과학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이를 소개하여 그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이러한 리처드의 선교 방식은 다른 선교사들과의 충돌로 이어졌다. 리처드를 비판한 선교사들은 서구 학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선교의 목표는 관리나 지식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처드는 언론의 힘을 체감하면서 중국에서 여론 주도층의 생각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초점을 중국 관리들과 지식인

27 Chih-wen Kuo(2020), "God, Western Learning, and Personal Memento: Timothy Richard's Literary Work in Late Imperial China", Ph.D. dissertation, Heidelberg University, pp. 17-22.

28 Chih-wen Kuo(2020), pp. 28-31.

29 Chih-wen Kuo(2020), pp. 34-39.

에게 두었고,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서구 학문을 소개하고자 했다.[30]

리처드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선교활동을 이론화시켰다.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은 도덕적 가르침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적, 물질적 활동에 모두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소개한 서구학문은 중국 지식인들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과학과 기술의 전파는 중국의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31] 즉, 선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천국을 지상에 가져오는 것이며, 중국에 하나님의 천국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리처드 자신에게 내린 사명이라고 여겼다.[32]

그렇기에 리처드는 『19세기』와 같은 서양의 역사책을 번역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다. 또한, 『19세기』를 『태서신사람요』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정치사상을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사상인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리처드와 함께 사실상의 공동번역자인 채이강은 1852년에 가정(嘉定)에서 태어났으며, 유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채이강은 어릴 때부터 과거시험 공부를 했으며, 이에 소년기에는 지방 단위의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생원(生員)이 되었다. 그러나 상층 신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관문인 향시(鄕試)에 통과하지 못하여 거인(擧人)이 되지 못했다.[33]

향시에 합격하지 못한 채이강은 1876년에 『신보』(申報)에 들어가서 1878년까지 활동했다. 『신보』에서 근대 신문의 경험을 쌓은 채이강은

---

30 Chih-wen Kuo(2020), pp. 51-61.

31 중국에 와있던 진보적인 선교사들은 과학과 기술 지식을 다루는 『격치휘편』, 『만국공보』 등의 정기간행물을 출판하고 있었으며, 리처드와 같이 서구 학문을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는 비록 비판을 받기는 했으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동료 선교사들에 의해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Chih-wen Kuo(2020), pp. 84-85.

32 Chih-wen Kuo(2020), pp. 74-83.

33 章晖·马军(1998), 「游离在儒耶之间的蔡尔康」, 『历史与人物』 1998年 第5期, p. 72.

1883년에 『자림호보』(字林滬報)에서 편집 총주임을 맡아서 1891년까지 일했다. 이어서 1893년에 창간된 『신문보』(新聞報)의 창간에 참여했다가, 곧 『만국공보』로 이동했다. 채이강은 『만국공보』에서 리처드와 합작으로 번역과 저술을 진행했고, 1894년 2월부터 1901년 12월까지 『만국공보』의 주필로서, 『만국공보』를 주관했다. 『만국공보』를 떠난 이후에는 1903년에 잠시 다른 신문의 창간에 관여했다가 언론계에서 사라졌다. 이후 행적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의 정확한 사망 연대는 파악되지 않는다.[34]

이상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채이강은 어린 시절부터 과거시험을 준비하여 중간단계의 시험까지 합격할 정도로 유교사상의 맥락을 충분히 알고 있는 유교 지식인이었으며, 『태서신사람요』를 번역할 시점에는 20년 가까이 언론계에서 근무하면서 독자들의 수요에 맞는 글을 생산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채이강은 선교사들이 세운 『만국공보』에서 근무하였으나, 여전히 유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1875년부터 1891년까지 언론계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7번이나 향시에 도전하는 등 과거시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35] 채이강이 자신의 명함에 자신이 받았던 생원 신분을 표기한 것을 보면,[36] 그는 내심 과거시험을 통한 벼슬길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교 지식인이었다.

채이강은 『만국공보』에서 활동하면서 서양 선교사들과 가깝게 지냈고, 이에 1895년에 중국사회와 선교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공개적으로 선교사들을 변호했다.[37] 그러나 채이강은 유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넘어

---

34 田中初(2009), 「游离中西之间的职业生存-晚清报人蔡尔康述评」, 『新闻与传播研究』 第11卷 第3期, pp. 44-46.

35 杨华波(2024), 「"林君之口, 蔡君之手" : 清末译史上的华人笔述者蔡尔康」, 『历史教学问题』, 2024年 第6期, p. 36.

36 田中初(2009), p. 48.

37 章晖·马军(1998), p. 73.

가지 않았다. 그는 공자는 동양의 성인이며, 예수는 서양의 성인이라고 하면서 유교와 기독교를 조화시키려 했고, 그 자신은 유교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다.[38] 채이강은 유교와 기독교를 모두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스스로는 유교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던 것이다.

리처드와 같은 선교사들은 한문을 능숙하게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태서신사람요』를 번역하는 방식은 선교사인 리처드가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구술하면, 중국의 지식인인 채이강이 이를 필술(筆述)하여 가다듬는 형태였다.[39] 『19세기』라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에 착수한 것은 리처드였고, 이를 유교의 사상적 맥락에 맞게 가공한 인물은 채이강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채이강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유교 지식인이었기에 유교의 정치사상적 맥락으로 『19세기』를 가공했으며, 리처드는 중국의 자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선교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가공을 용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두 번역자의 합작품으로 19세기 서양 정치사상이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으로 재가공된 『태서신사람요』가 탄생할 수 있었다.

3. 자유주의의 번역과 유교

3.1. 자유주의와 유교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는 19세기의 서양사를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자유주의가 역사적으로 승리

38 章晖·马军(1998), p. 74.

39 杨华波(2024), p. 35.

했다는 자유 승리사관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19세기』에는 일일이 세기 어려울 만큼 매우 많이 자유가 등장하며, 자유주의 사상의 주장들이 책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자유'(liberty, freedom) 개념과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데 동원할 수 있었던 유교 사상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 현재 'liberty, freedom'의 번역어로 쓰이는 '자유'(自由)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 문화권에서 '자유'(自由)는 중국의 고전어휘로서 '제한을 받지 않음', '자기 마음대로 함', '장애나 구속이 없이 자유자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한, 제약, 구속에 대한 대응어로 사용되었다. 자유는 때로는 자기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고, 때로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19세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에서 'liberty, freedom, free'와 같은 단어들이 번역될 때 자주(自主), 자유, 자주지리(自主之理) 등으로 번역되었는데, 대체로 자유보다는 자주가 더 선호되었다. 이는 자유에 '제 멋대로'라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었기에 사용하는 데 저항감이 있었기 때문이다.[40] 이처럼 '자유(自由)'라는 단어가 번역어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회의 저항이 있었다는 점은 'liberty, freedom'과 같은 서양의 자유개념이 유교 지식인들에게 수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19세기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유교 사상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일부 논자들은 유교사상과 자유주의 사이에 접점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성리학이 주장하는 위기

---

40 강명희(2022),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23-46. 한편, 일본에서는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에도시대부터 자유라는 번역어가 정착해갔고, 1860년대부터는 자유라는 번역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1898년 무술변법의 실패 이후 강유위, 양계초 등이 일본으로 망명한 이후에 일본식 한어인 자유를 사용하게 되면서 중국에 '자유'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다. 강명희(2022), pp. 41-45; p. 158.

지학(爲己之學)이 내포하고 있는 개인의 자주성 강조 및 자발적 정신의 고취에 주목했다. 성리학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자기 나름의 자질과 성향을 마음껏 펼치게 하며, 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보장하는 경연과 사관제도 등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사상에서는 이미 자유주의가 말하는 개인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만 법률, 인권과 같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반되는 개념들 및 자유를 보장할 구체적인 제도적, 법률적 기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41]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른 편이다. 성리학에서 자신의 수양을 위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늘이 부여한 본연지성을 되찾기 위한 것이다. 즉, 각 인간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 노력이 향해야 할 곳은 각자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보편적인 질서인 천리(天理)인 것이다. 천리와 본연지성으로 향한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성리학은 격물치지(格物致知)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는 곧 자신의 주관성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진리(=천리)를 향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유교사상이 자유주의적 개인의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유교 정치사상이 군주의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을 정당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세기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은 권력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연권으로서의 개인의 자유가 있으며,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입헌체제, 대의제 정부, 법치,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교 정치사상에는 이러한 내용과 결합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이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번역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19세기』에 나와 있는 자유개념과 자유주의 사상을 번역해야만 했다.

---

41 강명희(2022), pp. 33-40.

3.2. 『태서신사람요』와 자유주의

그렇다면, 번역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 『19세기』는 1848년의 혁명을 통해 유럽인들이 자유의 대의(the cause of freedom)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자유주의(Liberalism)는 절대주의의 힘(the forces of absolutism)과 투쟁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서술했다.[42]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1848년(도광 28년), 프랑스에서 제3차 대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프랑스 백성과 유럽 다른 나라 백성들을 권세로써 다스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옛날에 백성들이 국가와 권(權)을 다투었을 때, 각국은 모두 군대로써 힘으로 억눌렀는데, 이제는 각국 군사들이 백성들과 마음을 함께하였고, (이는) 전에 (군대가) 군주의 명령에 복종하였던 모습과 같았다. 그러니 군주들이 오히려 어디에 의지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번역되었다.[43]

『19세기』는 자유주의와 절대주의의 대립을 강조하고, 자유의 가치가 유럽인들 사이에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했고, 뒤이어 군대가 자유주의를 탄압하라는 군주의 명을 따르지 않았으며, 결국 자유주의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서사를 완성해갔다.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에서 나온 각국 군사가 백성과 마음을 함께했다는 표현은 해당 부분의 다음 부분까지 포괄하여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태서신사람요』는 해당 부분을 번역하면서 『19세기』의 핵심 내용인 '자유'나 '자유주의'를 일절 번역하지 않았고, 이를 유교적 언어로 대체하는 용어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19세기』가 서술한 자유주의와 절대주의의 대결이라는 맥락 자체가 『태서신사람요』에서는 통째로 누락되었다.

---

42 Robert Mackenzie(1891), pp. 457-458.

43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5. "一千八百四十八年(道光二十八年)法國第三次大亂, 人即知法民與歐洲他國之民再不能專以權勢治之矣. 昔之民欲與國家爭權, 各國皆以兵力壓之, 今則各國之兵與民一鼻孔出氣, 直如往日之恪遵君命, 君尚何所恃哉?".

자유주의에 대한 누락은 다음 부분에서도 계속되었다. 『19세기』는 1848년의 혁명에서, 자유주의(Liberalism)가 절대주의 정부(absolute governments)가 지휘하는 군사력에 의해 탄압되었지만, 절대군주들(The absolute princes)은 자유로운 제도의 승인(the grant of free institutions)을 통해 인민들과 평화를 얻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고 서술했다.[44]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지난날 유럽의 백성들은 모두 옛 제도 때문에 고생하였고, 국가의 권력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군주와 재상이 여정(輿情)에 조금도 순응할 줄 모르면서도, 백성들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은 평온해 보였으나, 그 마음은 나날이 불온해졌다. 국법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는데, 모두 이러하였다. 그러니 (나라를) 오랫동안 평온하게 다스리려 한들, 어찌 가능하겠는가? 각국의 제왕들이 이러한 정형을 보고, 나중에 반드시 대란이 있을 것이라 두려워하여, 비로소 법을 만들어 민심을 안정시켰다."[45]

『19세기』에서 자유주의가 탄압되었다는 부분은 "유럽의 백성들은 모두 옛 제도 때문에 고생하였고, 국가의 권력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라고 번역되었다. 『19세기』가 서술한 자유주의와 절대주의의 대립이라는 구도는 모두 누락되었고, '절대주의'는 옛 제도(舊制)로 번역되어 『19세기』가 의도한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한편, 『19세기』에서 말한 '자유로운 제도'(free institutions)는 『태서신사람요』에서는 '법을 만들어 민심을 안정시켰다'(始有設法以安民之心)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유교 정치사상의 민본주의적 가치인 안민(安民)을 이루게 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것이었다. 번역자들이 자유주의와는 내용적으로 접점이 거의 없는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하면서 자유주의적 의미들은 증발되어 버렸다.

---

44 Robert Mackenzie(1891), pp. 458-459.

45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6. "歐洲之民既各困於舊制, 受制於國權, 然其心皆謂吾君吾相亳不知俯順輿情, 實屬添居民上, 故平者其跡, 益不能平者其心, 不服國法之人遍地皆是, 欲求長治久安, 豈可得哉?各國帝王見此情形, 恐日後必有大亂, 始有設法以安民之心."

이처럼 번역자들이 자유와 자유주의를 민본주의 사상의 맥락으로 번역하면서 자유주의적 맥락이 상실되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19세기』는 1848년 혁명 이후의 유럽을 설명하면서, "서유럽은 이제 자유롭고 자치적인 곳이 되었다."라고 서술했다.[46]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이때부터 유럽 서방의 각국이 더 이상 십여 명의 제왕의 족속들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민심(民心)을 살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번역되었다.[47] 후술하겠지만, 민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구절은 민심을 천(天)과 연결했던 유교의 민본주의적 표현이다. 자유, 자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념들이 민심을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는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된 것이다. 종합하면, 자유(liberty, freedom)와 자유주의(Liberalism)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 개념들은 대체로 누락되거나,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변환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19세기』의 자유주의 사상의 맥락과 언어들은 『태서신사람요』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거의 전달될 수 없었다.

다만 '자유'(liberty, freedom)라는 개념어가 번역과정에서 모두 삭제된 것은 아니다. 『태서신사람요』에서는 'liberty, freedom'이 종종 누락되지 않고 '자주'(自主)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설사 'liberty, freedom'이 누락되지 않고 번역되었다 할지라도 자유주의적 맥락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세기』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유럽국가들에서 인민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타고난 자치권(their liberties and won back their inherent right of self-government)을 얻기 위해 투쟁했으며, 끝내 승리를 얻었다고 서술했다.[48]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왕들은) 모두 (백성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 그 뒤로

---

46 Robert Mackenzie(1891), pp. 459-460. "Western Europe was now free and self-governing."

47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7. "自時厥後, 歐洲西半各國不按十數帝王之族隨意治民, 而按民心以治國."

48 Robert Mackenzie(1891), pp. 454-455.

50년이 흘러, 각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이 약속을 어기고 자기 배만 채운 것에 불복하여, 일제히 일어나 자주(自主)를 요구했고, 군주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요구를) 승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각국은 점차 그 백성을 중시해야 함을 알게 되자, 백성들은 모두 자주(自主)를 얻었고, 이로 인해 국세(國勢)가 마침내 크게 흥하였다."라고 번역되었다.[49]

『19세기』는 정부와 인민의 대결에서 인민들이 자유와 자치권을 얻기위한 투쟁을 했고, 결국 승리했음을 강조하였는데, 『태서신사람요』는 정부와 인민의 대결보다는 인민에게 자주를 허용한 뒤에 국가가 흥하는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즉, 19세기 서양 자유주의 담론 안에서 서술된 『19세기』는 인민의 자유와 자치권 쟁취를 중시했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가치와 정당성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태서신사람요』를 읽는 유교 지식인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별로 감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궁극적 관심은 서세동점의 시대 상황 속에서 위기에 빠진 국가를 어떻게 흥하게 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고, 인민의 자유 쟁취는 그 자체로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만 가치가 부여될 수 있었다.

이처럼 『19세기』가 크게 강조하였던 자유주의적 맥락은 번역과정에서 누락되는 비중이 매우 컸으며, 자유를 번역하는 일부 사례 역시 그 의미가 크게 축소되었다.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유교의 정치사상에서 자유주의 사상의 맥락과 접목시킬 만한 사상적 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탈리아 통일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19세기』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끌게 되는 사르데냐 왕국이 이탈리아에서 유일하게 자유(liberty)를 지키는 국가였고, 오스트리아 황제, 교황 등이 지배하는 다른 대부분의 이탈리아 지역은 독재 세력들(despotic forces)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결국 이탈리아에서는 "자유는 전제주

49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3. "不料至此而均食其言, 嗣後曆五十年之久, 各國之民均不服其王之食言而肥, 一一起而求自主, 且迫其主以不得不允之勢, 迨各國漸知重視其民, 民皆得以自主, 國勢遂由是而大興."

의를 몰아내거나, 전제주의에 의해 짓밟혀야 했다."라고 서술했다.[50] 『19세기』는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필연적 대립을 강조하면서, 사르데냐의 이탈리아 통일이 곧 자유의 승리라는 인식을 표현하는 매우 강렬한 서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사르데냐에서는 이미 의원(議院)을 설립하고, 반드시 백성들이 국가와 함께 일을 처리하였는데, 사르데냐 이외의 국가들에 속한 이탈리아의 나머지 백성들은 (통치형태가) 사르데냐와 상반되었다."라고 번역되었다.[51] 이러한 번역은 사르데냐와 다른 이탈리아 지역 사이에 정치체제가 달랐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결이라는 『19세기』의 선명한 자유주의적 맥락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태서신사람요』가 사르데냐 왕국의 특징을 '의원을 설립하고 백성들이 국가와 함께 일을 처리'한다고 번역한 부분은 민본주의적 맥락에서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 인민이 선출한 의회와 정치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52] 즉, 자유주의적 맥락은 번역자들을 통해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변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 『19세기』에서 의도했던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립이라는 구도가 완전히 탈각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9세기 서양의 정치사상과 정치언어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립이라는 강렬한 대립적 개념항이 유교적 독자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러한 맥락을 전달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이다.[53]

---

50 Robert Mackenzie(1891), pp. 360-361.

51 李提摩太·蔡爾康(2002), p. 316. "薩諦尼亞已立議院, 准其民與國家協辦各事, 其餘分屬他人者皆正與之相反"

52 필자가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서술하는 민주주의를 민본주의와 접목시켜 서술하는 부분에서 민심을 강조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의회 및 선거제에 의미를 부여하는 서술과 논리구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53 중국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한 사람은 양계초로 추정되며, 그는 1898년의 무술변법운동의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한 상황에

혹자는 번역자들이 자유주의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맥락을 번역하는 것을 꺼린 것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이유였다면, 자유주의 사상이 강렬하게 담겨 있는 『19세기』가 아니라 다른 역사서를 번역했을 것이다. 번역자들이 『19세기』를 3년에 걸쳐 공들여 번역한 것은 그러한 의문이 사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번역자들이 자유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태서신사람요』에도 남아있다. 예컨대 『19세기』는 1820년대에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이 진압된 것을 설명하면서, "남부(=남유럽)의 자유주의적 동요(The liberal agitations)는 그 주도자들의 학살로 진정되었다."라고 서술했다.[54]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이때에 유럽 남방의 국가들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점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게다가 (백성이 근본이라는) 이치를 견지하면서 군주들과 다투던 영수(領袖)들이 모두 주살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구나!"라고 번역했다.[55]

『태서신사람요』는 자유주의자들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이치, 곧 민본주의를 견지한 사람들로 번역했는데, 이는 『태서신사람요』가 민본주의를 중심으로 이 책을 맥락화한 점을 고려해볼 때, 번역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번역자들은 이렇게 자유주의자를 우호적으로 번역하면서도 자유주의의 맥락을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요구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원리들(헌법정치, 자유보장)은 '백성

서 자유에 대해 소개하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기존의 중국 지성계에서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이 없었던 상태에서 번역을 해야 했기에, 번역에 동원할 수 있는 사상적 맥락과 개념이 매우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54 Robert Mackenzie(1891), pp. 455-456. "The liberal agitations of the south were calmed by the slaughter of their authors."

55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4. "於是歐洲南方諸國仍不識民之爲邦本, 凡執理與君上相爭之各領袖悉就誅夷, 殊可悼歎!"

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유교의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되었다.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자유주의적 정치언어들을 유교적 맥락으로 바꾸기 위한 적절한 언어를 찾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민본주의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적 의미는 독자들이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탈각되었다.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19세기 말에 유교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자유주의를 번역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자유주의와 접목할 만한 마땅한 언어적 자원을 찾을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의 언어들을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했다. 이는 후술하는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번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3.3. 『태서신사람요』에서의 입헌정부 개념의 번역

그렇다면 자유, 자유주의 같은 '자유'와 관련된 단어들만 번역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일까? 19세기 자유주의는 입헌정부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다.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입헌정부에 대한 번역에서 자유주의적 맥락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

『19세기』는 엘바섬에서 돌아온 나폴레옹이 인민들이 원하는 자유(liberty)와 입헌 정부(constitutional government)를 수용하려 했다고 서술했다.[56]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유럽의 여러 군주 중 오직 나폴레옹만이 민심을 먼저 헤아릴 수 있었다. 그가 엘바섬에서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민심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백성들이 군민공주지국(君民共主之國)을 만들고자 한다면, 나는 민심(民心)을 따르기를 원하며,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번역되었다.[57]

---

56 Robert Mackenzie(1891), p. 453. "Napoleon himself was the first to appreciate the change. On his return from Elba. he intimated that as the people wished for liberty and constitutional government he was ready to grant their wish."

57 李提摩太·蔡爾康(2002), pp. 402-403. "歐洲各國之君惟拿破倉矢能先知民心, 其從愛來巴

『19세기』는 나폴레옹이 따르려고 했던 프랑스 인민들의 요구가 자유와 입헌정부였다는 점을 서술하면서 자유주의적 맥락을 표현하고 있지만, 『태서신사람요』에서 이 내용은 '군민공주'와 '민심'을 따르는 정치로 번역되고 있었다. 후술하겠지만, 민심은 민본주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민본주의로 번역할 때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태서신사람요』가 나폴레옹의 말을 민심을 따라 군민공주의 정치를 하겠다고 번역한 것은 자유주의적 맥락을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과정에서 입헌정부가 자유주의 사상에서 갖는 의미는 거의 모두 증발해버렸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19세기』는 이탈리아 통일의 주축이 된 사르데냐의 총리 카부르의 사상을 이렇게 서술했다. "그는 자유, 입헌 정부, 무역의 자유 없이는 국가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58]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카부르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민간에서 의원(議院)에 들어갈 관리를 천거하여, 그 관리들과 국가가 기밀 사안들을 함께 상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민간에서 각국과 통상할 때, 국가는 반드시 그들이 임의로 경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조금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 두 번째요. 반드시 소민(小民)이라도 모두 자주지권(自主之權)을 가지게 해야 하는 것이 세 번째였다."라고 번역되었다.[59]

이를 살펴보면, 『19세기』에서 '자유, 입헌정부, 무역의 자유'라고 짧은

海島逃回法國之時, 知民心失, 已全變故, 即言民若欲成君民共主之國, 餘願順民心而不悔也".

58 Robert Mackenzie(1891), pp. 360-361. "He returned with a deep conviction that national welfare was impossible without liberty,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freedom of trade."

59 李提摩太·蔡爾康(2002), p. 317. "灼知乎興國之大要有不可欠闕之事三: 凡民間舉入議院之官, 國家有機密事宜與之同心商辦, 一也。民間與各國通商, 國家必許其任意經營, 毫不加以禁阻, 二也。必使小民皆擅自主之權, 三也."

개념어로 설명한 것을『태서신사람요』가 길게 풀어서 설명한 것은 자유주의 사상을 표현하는 이 개념어들이 유교 지식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헌법'에 대한 것이다. 자유주의 담론에서 입헌정부가 중요한 이유는 헌법에 의해 군주 혹은 인민이 선출한 통치자의 독재를 방지하고,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여 자유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즉 입헌정부의 핵심적 특징은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 권력의 쏠림이 아닌 균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입헌정부를 "민간에서 의원(議院)에 들어갈 관리를 천거하여, 그 관리들과 국가가 기밀 사안들을 함께 상의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번역함으로써 유교의 정치사상인 민본주의에서 주장하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로서의 의미로 맥락화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헌법, 법치, 권력균형과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은 누락되었다.

입헌정부에 대한 누락은 헌법에 대한 누락으로도 이어졌다.『19세기』는 스페인의 자유주의 운동에 의해 스페인 왕이 어쩔 수 없이 1812년에 제정되었던 헌법을 선포한 것에 대해 "왕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1812년 헌법이 선포되었다."라고 서술했다.[60] 이 내용은『태서신사람요』에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1812년의 새로운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번역되었다.[61]

1812년 헌법(the constitution of 1812)은 '새로운 법(新章)'으로 번역됨으로써 '헌법'이라는 개념이 담지하고 있었던 자유주의적 의미들은 삭제되어 버렸다. 즉,『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자유나 자유주의의 번역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과 입헌정부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유교의 정치사상과 접목시키는 데에 실패했고, 그래서 번역과정에서 자유주의

60 Robert Mackenzie(1891), pp. 455-456. "The king was obliged to yield, and the constitution of 1812 was proclaimed."

61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04. "王不得不許其民仍遵一千八百十二年(嘉慶十七年)之新章以治國."

적 맥락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번역자들은 자유주의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자유주의의 주된 가치와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번역자들은 독자인 유교 지식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인정할 만한 번역어, 곧 자유주의 사상의 번역을 위해 유교 정치사상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거의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역사가 자유주의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강렬한 주장을 가진 『19세기』가 『태서신사람요』를 통해 유교 지식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작 자유주의는 증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4.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착종과 이중변형

4.1. 유교의 민본주의 정치사상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에서는 보통선거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서술했다. 또한, 보통선거제의 결과 인민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19세기』는 충분히 교육받고 이성적이 된 인민이 통치권력을 장악하여 자기 통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라고 서술함으로써, 자유주의에 맞게 순치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 『19세기』에 서술된 민주주의를 번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유교 사상의 자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마침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에는 민본주의가 있었다. 민본주의는 『서경』(書經)에 나온 구절인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62]에서 보여지듯이,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맹자는 민본주

62 『書經』, 「夏書」, "民惟邦本 本固邦寧."

의를 더욱 발전시켜서,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그러므로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된다."[63]라고 하였다. 민본주의 사상의 핵심 내용은 정치의 근본 목적이 백성에게 있으며, 군주를 비롯한 정치권력의 근거가 백성의 마음, 곧 민심(民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민본주의는 민심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본주의에 민심이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기반이 된다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일까? 이는 민본주의가 유교 정치사상의 근본적인 원리인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에 그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원한 것이었다. 고대 중국의 주나라 시대부터 나타난 천인합일론은 천도(天道)와 인도(人道)가 본질적으로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졌으며, 그 원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민(民)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므로 천명(天命)에 의해 군주가 된 사람은 민(民)을 사랑하는 정치를 해야 했다. 이러한 천인합일론은 군주의 지배권력을 천의 권위에 의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군주에게 유리한 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천이 군주에게 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명령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므로 군주의 지배권력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기도 했다.[64]

천인합일론에서 인간이 따라야 하는 천(天)의 지향하는 바가 관념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시킬 기준이 필요했다. 그 기준을 민심으로 만들려는 맹아적인 시도는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다"라는 『서경』의 문장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65] 그리고 맹자를 거치면서 천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민심(民心)이 명확히 등장하게 된다. 맹

---

63 『孟子』, 「盡心下」,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是故得乎丘民而爲天子 得乎天子爲諸侯 得乎諸侯爲大夫."

64 이석규(1995), 「조선초기 민본사상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105-106.

65 『書經』, 「泰誓」,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자는 민의 마음을 얻으면 민을 얻는 것이고, 민을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66] 맹자는 천인합일론에 존재했던 관념적인 천명(天命)의 의지를 판단하는 구체적이고도 유일한 기준으로서 '민심'(民心)을 제시했던 것이다.[67]

그리하여 민본주의는 하늘이 지배층에게 백성을 위한 정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념적인 하늘의 의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민심을 강조하는 논리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민심은 민본주의 사상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 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유교에서는 하늘의 의지를 민심과 동일시하면서도 백성을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68] 그러므로 유교의 정치사상에서 민심은 정치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하고, 집권자들은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백성이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 요약하면, 유교의 민본사상에서 민심은 청취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 그 자체가 정치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민본주의는 민주주의의 원리인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인민의' 정치에서, '인민을 위한'이라는 점을 공유할지라도 '인민에 의한' 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속성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민본주의가 생각한 인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이었을까? 민본주의가 주장하는 인민을 위한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을 통해 백성이 자신이 사는 거주지와 직업에 안거낙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안민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과 형으로 백성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法治), 지배층의 도덕실천을 통한 솔선수범과 예를 통한 다스림(禮治)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도덕적으로 각성하도록 해야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심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득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백성의 어려운

---

66 『孟子』, 「離婁上」, "得其民 斯得天下矣 得其民有道 得其心 斯得民矣."

67 이석규(1995), p. 108.

68 이석규(1995), p. 123.

사정을 항상 청취하는 자세(下意上達)를 필요로 했다. 즉, 지배층의 도덕적 교화라는 위로부터의 소통과 백성의 어려움 전달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소통이 결합된 상하의 소통도 민본주의의 중요한 덕목이었다.[69]

이처럼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민본주의는 19세기 서양의 민주주의를 번역할 때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4.2. 민심(民心)을 매개로 한 민주주의에서 민본주의로의 번역

19세기 서양의 민주주의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인민 전체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보통선거제의 실시 여부였다. 이는 19세기 영국사에서 보통선거제를 향한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혁이 당대에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선거제의 문제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가 충돌할 수 있는 지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선거제, 특히 보통선거제는 인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가 극명하게 가진 원리적 차이인 '인민에 의한 정치'를 실현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19세기 영국사에 나타난 선거법 개혁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었을까?

먼저 『19세기』에서 영국의 선거법 개혁이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서술했는지부터 살펴보자. 『19세기』에서는 영국의 선거법 개혁 이전의 상황에 대해, 영국의 대의제도(system of representation)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18세기 후반부터 인식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영국의 대의제도는 하원 의석의 대부분을 사실상 귀족들이 선출권을 가지는 등 너무 부패하여 대표성이 거의 없었으며, 영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과 권한

---

69 민본주의는 경제적으로는 민생(民生)을 중시하고, 백성에게 항산(恒産)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다. 이 글은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민본주의의 경제사상과 『태서신사람요』 번역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속논문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 없었다고 서술했다.[70]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영국의 옛 제도는 본래 군주와 백성이 함께 다스리는 뜻(君民共主之意)이 있어서, 상원과 하원을 설립했다. (…) 그러나 그 폐단이 백 년 전부터 쌓여 심각해져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 집정자(執政者)들은 말하기를, '하원 의원들은 모두 민간에서 공거하는 바이니, 만약 민생(民生)을 매우 어렵게 하는 곤란함이 있다면, 어찌 이를 위에서 듣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의원들을) 백성이 올린다(民擧)는 것은 이름뿐이고, 실제로는 관리가 올린다(官擧)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 살피건대, 의원으로 뽑힌 자는 반드시 민심(民心)을 헤아려 백성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고, 이로움을 일으키고, 폐단을 없애기를 기약하는 사람이어야 했다."[71]

이 번역에서 드러나는 현상적인 차이는 영국의 선거법 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인 영국의 입헌군주제(君民共主之意)와 상하원 양원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19세기』는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술된 책이었기에 이러한 설명을 생략했지만, 유교 지식인들을 독자로 상정한 번역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삽입했다. 또한, 『태서신사람요』에 나오는 집정자(執政者)의 발언 및 의원은 반드시 마땅히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19세기』의 해당 부분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즉, 번역자들은 『19세기』에 없었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추가하면서 내용을 서술하였다. 그런데 번역자들이 독자적으로 추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집정자의 발언은 하원의 의미를 민간에서 선거하기에 민생(民生)의 어

---

70 Robert Mackenzie(1891), pp. 99-100.

71 李提摩太·蔡爾康(2002), pp. 71-72. "英國舊制本寓君民共主之意, 故設立上, 下兩議院 (…) 顧流弊至百年以前積重難返 (…) 執政者之言曰:下議院諸員皆民間所公舉, 苟有重困民生者, 豈有不以上聞之理？此言似也, 而不知民舉者其名也, 官舉者其實也. (…) 查充作議員者必其能體貼民心, 代民辦事, 以期興利除弊者也."

려움을 위(上)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민본정치가 항상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상하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로서 하원을 정당화하는 설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관리가 선거(官擧)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선거(民擧)해야 하며, 그렇게 뽑힌 의회의 의원은 반드시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서술하였다. 즉, 번역자들은 민본정치의 핵심인 민심(民心)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선거제를 유교 지식인들에게 정당한 제도로서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다.[72] 그러면서 19세기 초 영국의 선거법 개혁 이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서술한 『19세기』의 서술을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상하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민본주의적 비판의 맥락으로 번역하였다.

번역자들은 19세기 영국의 선거법 개정의 결과도 '민심'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바꾸어 서술하였다. 『19세기』는 선거법 개혁의 결과 하원 의원들은 수많은 유권자들로부터 만들어진 권위에 의해 발언하므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치가는 인민의 소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고, 숨겨진 여론의 경향을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서술했다.[73]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마땅히 민심(民心)을 가까이 해야 하니, 의원(議院)의 의원(議員)들은 다만 군주의 명령만이 아니라, 백성이 선거한 바이니, 군주를 위해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의 사정을 진정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천리지공(天理之公)과 인심지정(人心之正)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쪽에서 소리를 내면 저쪽에서 화답할 것이요, 소리를 내지

72 무술변법 이전에 서양의 정치제도에 관심을 갖고 중국의 개혁을 주장하던 정관응(鄭觀應), 진치(震熾) 등의 초기 변법론자들은 의회를 상하의 의견을 소통하는 기구로 인식했다[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민본과 민주의 간극」, 『중국지식네트워크』 9, p. 63]. 즉, 『태서신사람요』에서 나타난 의회와 선거제를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19세기 말 중국의 정치사상사적 맥락 위에 있는 것이었다.

73 Robert Mackenzie(1891), pp. 144-145.

않아도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한번 관직에 오른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대개 먼저 민정(民情)을 널리 살핀 뒤에, 민정(民情)을 좇아 국사를 도모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마치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쉬워질 것이다."라고 번역되었다.[74]

『19세기』의 원래 서술은 다수 인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은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인민의 의사를 더욱 정치에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의 책 전체가 자유와 전제의 대결로 역사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은 군주권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태서신사람요』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이 의원을 선거하였으므로, 관원들이 민심을 따르는 것을 중시하여 치국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의원들은 백성이 선거했기에 민심을 따른다는 설명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군주와 배치되는, 즉 군권과 민권이 상반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군주를 위해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백성의 사정을 진정해야' 한다는 서술에서 보여지듯이, 민본주의적 담론에서는 민심을 따르는 정치, 백성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정치는 궁극적으로는 군주도 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민심을 살피는 것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번역자들은 의회의 의원들을 인민이 선출하고, 의원들이 군주의 마음이 아니라 민심을 따르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들을 민본주의적 언어들을 동원하여 구성하였다. 이어서 번역자들은 모든 백성이 관리를 선출하는 선거제 역시 민심을 따르는 정치로 서술함으로써 보통선거까지 민본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다.[75]

---

74 李提摩太·蔡爾康(2002), p. 110. "故治國事首宜體民心, 議院諸員非但爲君主所命, 兼爲民人所舉, 故欲爲君理事, 必先爲民陳情, 方協乎天理之公, 人心之正. 且此倡彼和, 不啻萬口同聲, 凡膺一命之榮者, 欲辦一事, 類先博考民情, 然後順民情以圖國事, 治國遂如視諸掌矣."

75 李提摩太·蔡爾康(2002), p. 435. "比戶几各有舉官之權, 既有此權, 內外大小諸事必將順民心以治理."

번역자들은 19세기 서양의 민주주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민본주의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견했다. 인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민심을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본주의의 원리가 서로 통하는 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번역자들은 민심(民心)을 19세기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를 번역할 때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동시켰다. 번역자들은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며, 민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민본주의적 논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19세기 서양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보통선거제를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소개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민본주의의 맥락 안에 민주주의적 제도인 선거제를 담아내는 과정이기도 했다. 즉, 번역자들이 19세기 서양의 민주주의적 제도를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민본주의 안에 민주주의적 제도인 선거제가 삽입되는 민본주의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민본주의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변형이었다. 민본주의 사상은 민심에 의해 지배권력이 결정된다는 원리를 이미 가지고 있었으나, 그 원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19세기 서양에서 전개된 선거제와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제 민본주의 안에 민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경험을 갖춘 제도로서의 선거제가 포함되게 되었다. 민본주의 사상은 민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갖춘 사상으로 변형되고 있었던 것이다.

4.3.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을 둘러싼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긴장

번역자들은 상술한 것처럼 민심을 매개로 하여 19세기 민주주의의 핵심적 문제였던 보통선거제를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정당화하면서 번역하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보통선거제가 의미하는 궁극적인 지향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인 '인민에 의한 통치'를 민본주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

『19세기』는 영국의 1832년 선거법 개혁에 대해 "다음 세대를 위해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를 출범시킨 위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평가했다.[76] 특히 『19세기』는 링컨이 말해서 유명해진 표현인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선거법 개혁이 민주주의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상술했듯이,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모두 인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지만, 민본주의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군주와 선비가 하며, 민주주의는 인민이 직접 하거나 인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한다는 점에서 메우기 어려운 균열이 있었다. 그러므로 위의 문구에서 포함된 "by the people"은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이때 이후로, 영국 정부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을 깊이 고려하였다. 재직 중인 관리들은 대소(大小)를 따지지 않고, 만약 조금이라도 민정(民情)을 거스르면 백성들이 현명한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관직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이에 영국 백성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번역되었다.[77]

번역과정에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개혁이라는 『19세기』의 메시지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민정을 신경쓴다는 민본주의적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은 삭제되었다. 대신 '민정'(民情)이라는 개념을 통해 곧 민심에 근거한 정치를 묘사함으로써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타협시키면서, 민본주의 안에서 민심의 의미를 더욱 강

---

76 Robert Mackenzie(1891), pp. 109-110. "the great measure passed which inaugurated, for all the coming generation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77 李提摩太·蔡爾康(2002), p. 79. "自時厥後, 英廷深念民爲邦本之義, 服官者无論大小, 苟或稍拂乎民情, 即許眾民另舉賢員以代其職, 英民皆大喜."

화하고 있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19세기』는 영국의 1832년 선거법 개혁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자치정부(self-government)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고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국인들을 자치하는 인민의 지위로 끌어올린 혁명(the revolution which raised the British to the rank of a self-governing people)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서술했다.[78]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이후에 옛 제도를 버리고 새 제도를 꾀했다. 영국 백성들은 각기 관장을 공거(公擧)하는 권(權)을 가지게 되었는데, 모두 자중해야 함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부지런히 학문을 닦았다. 그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사람에게 국사를 논할 권(權)이 없다면, (백성들은) 스스로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되었다.[79]

번역과정에서는 '자치정부'라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이는 인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의 논리가 19세기 말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위험하면서 민본주의 사상과 접합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에 영국 인민이 모두 '관장을 공거하는 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로 스스로 처신을 자중하고, 학문에 힘쓰게 되었다는 식으로 번역했다. 즉,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논리는 삭제되었지만, 사실상 인민의 자기통치로 가는 중요한 통로인 선거제도 자체는 긍정적인 것으로 서술되었다. 바꿔 말하자면, 인민의 자기통치는 인민이 관장을 공거하는 권한을 가지는 선거제도로 번역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민의 자기통치라는 궁극적 지향점과 민주주의의 원칙은 삭제되었지만, 그 지향점으로 가는 통로인 선거제도가 민본주의 담론의 맥락 안으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19세기』는 자치정부가 인간에게 이로운 이유로 사람들을 교육

78 Robert Mackenzie(1891), pp. 111-112.

79 李提摩太·蔡爾康(2002), p. 80. "而後舍其舊而新是謀, 英民各有公舉官長之權, 不特皆知自重, 且共孜孜向學, 其關系之重如此, 反是以觀, 人苟無議論國事之權, 自覺與禽獸無異."

하고 고귀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이 부분을 『태서신사람요』는 선거제도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학문과 자중함 때문으로 번역했다. 이는 인민의 자기통치와 선거제도가 거의 같은 것으로서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세기』는 자치정부를 통해 영국인이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진 것으로 묘사한다면, 『태서신사람요』는 선거제도가 없는 사람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고 서술함으로써 더욱 극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태서신사람요』는 인간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제 보통선거제는 인민을 위한 정치를 넘어 금수가 아닌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치로 의미가 강화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는 영국의 의회 선거법 개혁을 평가하면서, 개혁 이전에는 인민이 정부에 대한 통제권력이 없었다고 서술했다. 이어서 1832년의 개혁은 중산계급 개혁법(a middle-class Reform Act)이었지만, 1867년의 선거법은 노동계급 개혁법(a working-class Reform Act)이었으며, 이는 통제권력(the controlling power)을 인민의 손(the hands of the people)에 넘기는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선거권을 얻은 민주주의에서는 플랫폼과 언론(The platform and the press)이 강력해졌다고 서술했다.[80]

이 부분은 『태서신사람요』에서 "전국의 일이 몇몇 세가(世家)에 의해 결정되었고, 가난한 백성들은 조금도 참여(與)할 수 없었으며, 국사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 (백성들은) 온갖 고초를 다 겪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당시에는 감히 윗사람에게 청원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어찌 만백성을 모아서 한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었겠는가? (…) 1867년(동치 6년)에는 인원(=의원)을 공거하는 제도를 넓힐 것을 의논하였고, 그 뒤에는 그 권한을 백성에게 나누어(分) 주었으며, 과거에 사적으로 권세를 누리도록 한 법제를 거의 모두 없애 버렸다. 백

80 Robert Mackenzie(1891), pp. 144-145.

성들 또한 국사를 자기 집안일처럼 여기게 되었으며, 신문사(報館)에서 주장하는 바나 골목길에서 나누는 이야기나 모두 군주가 진실로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君實爲民而設)고 말하는 것뿐이었다."라고 번역되었다.[81]

번역과정에서 중산계급, 노동계급과 같은 단어들이 빠졌는데, 이는 번역자들이 영국사회의 사회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영국의 정치개혁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대한 변화는 '통제권력'(the controlling power)에 대한 번역이다. 이 절에서 통제권력은 두 번 언급되는데, 한 번은 백성의 국정 '참여(與)'로 번역되고, 다른 한 번은 의원 선거권을 백성에게 '나누어(分)'준 것으로 번역되었다.

서양의 민주주의 사상에서 보통선거제는 정부의 통제권력을 인민이 장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세기』는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영국의 선거법 개혁을 인민의 정부 통제권력 장악으로 서술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서신사람요』의 번역에서 통제권력 장악은 백성의 국정에 대한 참여 혹은 선거권을 나누어 가진 것 정도로 축소되어 표현되었다. 정부의 통제권력이 인민에게 넘어간다는 민주주의 사상의 의미는 삭제되었다. 대신 번역자들은 군주가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민본주의적 논리와 국사를 자기 일로 여기는 국가적 단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즉, 『19세기』는 선거법 개혁을 민주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했지만, 『태서신사람요』는 선거법 개혁을 당시 유교 지식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본주의의 실천과 국가의 단합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태서신사람요』는 영국의 선거법 개혁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19세기』

---

81 李提摩太·蔡爾康(2002), pp. 108-109. "全國之事皆操之於數世家, 貧窶之民分毫不敢與聞, 且亦不知國事之臧否, 故雖受盡苦楚, 只能坐以待斃, 當時亦無有人妄敢上請者, 又安有聯合萬眾, 同心辦事之舉 (…) 一千八百六十七年(同治六年)議廣公舉人員之例, 然後盡分其權於眾民, 舊日私操政柄之章程刪除殆盡, 民間亦皆視國事如家事, 報館之所持論, 裏巷之所偶語无非謂君實爲民而設."

의 맥락을 그대로 따랐으며, 이는 인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을 찬성한다는 의미였다. 인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술한 대로 민본주의에 입각하여 민심을 청취한다는 개념에 의해 민본주의 사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이 정부의 통제권력을 장악한다는 민주주의적 의미는 민본주의 사상으로는 포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번역자들은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사이의 경계를 의식하면서, 민본주의적 맥락에서 인민의 참정권을 옹호하되, 그 참정권이 가져올 실질적· 궁극적 결과는 숨기는 방식으로 번역을 진행했던 것이다.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번역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었다. 『19세기』는 언론이 사람들에게 절제되고 지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대화 주제를 만들어 간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에 의해 통치권력(the governing power)인 여론(Public opinion)이 형성되어 위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82] 이러한 서술에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론이 곧 통치권력을 형성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위와 아래가 단절되어 근심할 일이 없고, 이로움과 해로움이 뒤섞일 걱정이 없으니, 나라를 도모하는 자 역시 모든 일이 쉽게 풀렸고, 소민들은 감히 번거로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었다.[83]

즉, 사회의 상층과 하층이 서로 신문을 통해 소통하여, 지배층은 정치하기가 편하고, 소민들은 안업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인 것이다. 그리하여 언론의 의미는 민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상하소통이라는 가치로 흡수되었다. 이러한 번역의 차이는 번역자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가 통치권력의 인민 전체로의 이양이라는 점을 가능한 한 숨기려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세기』가 생각했던 언론의 진정한 의미 역시 은폐될 수밖에 없었다.

---

82 Robert Mackenzie(1891), pp. 194-195.

83 李提摩太·蔡爾康(2002), p. 154. "上下无隔閔之憂, 利弊無混淆之患, 謀國者亦凡事易於措手, 小民不敢嘖有煩言."

4.4. 민본주의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의 등장

이처럼 번역자들은 19세기 서양 민주주의에 대한 번역과정에서 민본주의 안에 선거제를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이라는 의미는 누락시켰다. 그런데 번역자들의 작업은 민주주의의 선거제를 민본주의 안에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본주의 안에 '민주'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주입하고 있었다.

『19세기』는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출간된 『백과전서』가 인간의 자유 확대를 주장하고, 잔인한 전제정치(the cruel despotisms)를 저주하며, 대의제와 자치정부(representation and self-government)를 옹호했다고 서술했다.[84]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그 명의하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윗사람이 구염을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빛내기를 바라는 데에 있었다. (…) 또 말하되, 하늘이 백성을 낳은 후에 비로소 군주를 세웠으니, 마땅히 민심(民心)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민(下民)이 군주에 의해 세워진 바가 아니므로, 군심(君心)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 조정으로 하여금 즉시 옛 제도를 바꾸어 민주(民主)가 된 연후에 백성이 평안 무사할 것이라고 하는 듯했다."라고 번역되었다.[85]

이미 언급했듯이, 『19세기』의 전반적인 주제는 자유와 전제정치의 대립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축은 유교적 정치관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19세기』가 강조했던 전제정치라는 부정적 개념은 '구염'(舊染) 혹은 '옛 제도'(舊章)로 번역되었으며, 자유에 대한 강조도 사라졌다. 따라서 자유와 전제정치라는 대립축은 번역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

---

84 Robert Mackenzie(1891), pp. 14-15.

85 李提摩太·蔡爾康(2002), p. 6. "其命意之所在, 無非冀上之人去舊染而煥新猷 (…) 又有謂天生民而始立之君, 自當以順民心爲重, 非下民爲君所立而以隨君心爲重也. (…) 直若欲朝廷立變舊章易爲民主, 而後民乃可相安無事也者."

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19세기 서양 정치사상의 핵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주요한 제도인 대의제와 자치정부(representation and self-government)는 하늘이 사람을 낸 후에 군주를 세웠으므로 마땅히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민본주의의 논리로 서술하였다.

이 부분은 필자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반복된 부분인데, 여기에 이 부분을 가져온 이유는 '민주'(民主)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근대 이전의 중국에서 민주(民主)라는 개념은 민지주(民之主), 곧 민의 주인이라는 의미로서 최고통치자 혹은 천자(天子)를 의미했다. 그런데 1860년대와 1870년대에 서양의 사상과 정치체제가 번역되는 과정에서 democracy를 번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태서신사람요』가 번역된 19세기 말의 중국에서 '민주'는 1) 민의 주인(=황제), 2) 민이 주재한다(=인민의 지배와 통치), 3) 세습군주제에 대립되는 정치제도("民主之國"), 4) 외국의 민선 최고 국가영수(=대통령) 등을 의미하였다. 특히 4)의 의미가 탄생했던 이유는 민주정치의 대의제와 헌법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여, democracy를 대중이 국가원수를 선거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이해했기 때문이다. 즉, 민이 주인 됨(民作主)을 실현하는 것을 단순히 대중이 민의 주인(民之主)을 선거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86] 이는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과 지배라는 19세기 서양 민주주의의 의미가 당대의 유교 지식인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태서신사람요』의 내용을 살펴보면, 19세기 말 '민주'라는 개념의 의미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바로 민본주의가 실현된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이다. 위에 필자가 인용한 부분을 살펴보면, 번역자들은 18세기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하며, 그러한 정치를 하는 정치체제인 민주가 된 연후에 백성이 평안무사하게 된다고 주

86 진관타오·류칭펑(2010), 양일모·송인재·한지은 역,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서울: 푸른역사, pp. 270-276.

장했다고 서술했다. 이는 곧 민본주의의 핵심 가치인 안민(安民)을 위해서는 민본주의를 실현한 정치체제인 '민주'가 필요하다는 서술이었다. 즉, 민본주의가 실현된 정치체제라는 의미로서 '민주'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사례만으로 '민주'를 민본주의 사상을 실현하는 정치체제라는 개념어로 사용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19세기』는 영국의 1832년 선거법 개혁에 관해 서술하면서, 인간의 통치방식은 특권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혹은 한 계급에 의한 통치(government by an individual or a class)와 인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민 스스로에 의한 통치(government by the people themselves)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진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후자는 최근까지는 주로 앵글로색슨족(the Anglo-Saxon family)에게만 국한되었다고 서술했다.[87]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세상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한 사람이 정권을 잡거나 혹은 한 족속이 정권을 잡아 명령을 내리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방식인데, 이는 상고 시대에 그러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둘째는 서양 사람들이 이른바 민주지국(民主之國)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제도를 처음 구상할 때 영국,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모두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여겼으며, 백성이 편안하지 않은데 나라가 영원히 평안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라고 번역되었다.[88]

『19세기』는 이 부분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인민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고, 백

87 Robert Mackenzie(1891), pp. 111-112. 이 부분은 인종적 편견이 반영된 부분이다. 그러나 앵글로 색슨 인종에게만 투표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식의 편견은 19세기 서양 자유주의자들 사이에 상당히 많이 퍼진 것이었다. 헬레나 로젠블랫(2023), p. 359.

88 李提摩太·蔡爾康(2002), p. 108. "夫天下治國之法有二, 其一則一人爲政, 或一族爲政, 發號施令, 專便身圖, 上古類然, 不以爲怪. 其一則西人所謂民主之國也, 其創議之初, 英, 德, 美諸國人居其大半, 皆謂民爲邦本, 未有民不安而邦以永寧者."

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는 민본주의적 언어로 번역되었다. 즉, 인민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교리는 번역과정에서 삭제되고, 민본주의 사상으로 맥락화되었다. 이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번역자들이 '영덕미', 곧 영국, 독일, 미국이라는 국가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민주지국'이라고 호칭했다는 점이다. 이는 『19세기』의 앵글로색슨족(the Anglo-Saxon family)을 풀어서 번역한 것인데, 번역자들은 『19세기』에 담긴 인종주의적 함의를 유교 지식인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구체적인 국가의 이름들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앵글로색슨족의 범주를 구체적인 국가들의 이름으로 대체하고, 『19세기』가 규정했던 인민에 의한 정치체제를 실현한 국가들을,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원칙이 실현된 정치체제의 국가인 '민주지국'으로 번역하면서 새로운 효과가 발생했다.

19세기 서양의 정치체제는 크게 전제군주정, 입헌군주정, 민주공화정이 있었으며, 영국과 독일은 입헌군주정에 속하고, 미국은 민주공화정에 속했다. 전제군주정과 입헌군주정은 군주정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었고, 입헌군주정과 민주공화정은 입헌정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었다. 『태서신사람요』는 입헌군주정과 민주공화정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민주지국'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범주의 내용은 헌법과 삼권분립이 실현된 입헌정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원칙을 관철한 정치체제로 설정되었다. 요약하면, 번역자들은 '민주'를 입헌군주정과 민주공화정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범주로 만들면서, '민주'라는 범주의 정의를 민본정치사상이 실현된 정치체제라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본래 맹자로부터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민본주의는 왕도정치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며, 이를 더 구체화하면 도덕적인 왕과 선비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민본주의의 실현은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실천의 문제였으며, 이를 제도로 연결시킨다면 도덕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였다. 즉, 민본주의

는 군주정 정치체제를 전제하고, 지배층의 도덕성과 그 도덕성을 견지하게 하는 제도에 실현 여부가 달린 것이었다. 그렇기에 민본주의가 실현되는 정치 현상에 대한 용어로서 왕도정치와 패도정치가 나눠질 수는 있었으나, 민본주의가 실현되는 정치체제와 실현되지 않는 정치체제를 나누는 용어는 따로 없었다. 그런데 번역자들은 민본주의가 실현된 정치체제를 '민주'라고 지칭함으로써, 민본주의는 '민주'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게 되었다.

이제 '민주'라는 개념어에서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착종한다. '민주'는 『19세기』가 강조한 인민에 의한 통치체제의 번역이면서, 동시에 『태서신사람요』가 강조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정신에 근거한 정치체제를 지칭하는 개념어가 되었다.

'민주'가 민본주의 정치체제를 뜻하는 언어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을 하나 더 제시하자면 프랑스의 7월 혁명에 대한 번역부분을 들 수 있다. 『19세기』는 1830년의 7월 혁명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부르봉 왕조의 복고된 전제정치(the despotism of the restored house of Bourbon)에 저항하여 3일간의 전투 끝에 자유를 되찾았고, 자신들이 선택한 대로 통치받을 권리(their right to be governed as they chose)를 옹호했다고 서술했다.[89] 이 부분이 『태서신사람요』에서는 "(파리 시민들이) 군주당과 대전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군주를 쫓아내고 성언하기를, '군주가 백성으로써 근본으로 삼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법을 다시 바꾸어서 프랑스가 민주지국(民主之國)이 되었다."라고 번역되었다.[90]

『19세기』는 7월 혁명을 자유와 전제정치의 대결로 묘사하면서, 혁명의 성공을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대로 통치받을 권리, 곧 인민이 인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통치받는다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실현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번역과정에서 '전제정치'(despotism)라는 저항의 대상이 '군주

89 Robert Mackenzie(1891), pp. 107-108.

90 李提摩太·蔡爾康(2002), p. 77, "與君黨大戰三日, 卒逐其君, 聲言君不以民爲本, 安能治國? 遂再改法蘭西爲民主之國".

가 백성으로써 근본을 삼지 아니'하는 정치, 곧 민본정치에 반하는 정치로 묘사되었다. 그리하여 민본정치를 하지 않는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탄생하는 변화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 변화한 것으로 번역했다. 사실 이러한 번역은 19세기 서양의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830년의 7월 혁명에 의해 탄생한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정이며, 여전히 세습되는 군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당시 서양의 정치개념으로 본다면 1830년 혁명의 결과는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전제군주국에서 입헌군주국으로의 변화이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에서 『태서신사람요』는 입헌군주국을 '민주지국'이라고 번역했을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서신사람요』는 다른 부분에서도 민주공화국과 입헌군주국을 모두 '민주지국'으로 서술하여, 이들을 '민주'라는 범주로 묶었다. 그리고 민주공화정과 입헌군주정의 반대편에 있는 전제군주정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민본주의에서 어긋난 정치체제로 묘사했다. 즉, 번역자들은 전제군주정을 민본주의에서 어긋난 정치체제로 묘사하고, 민본주의에 충실한 정치체제를 민주공화정이든 입헌군주정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민주'라고 번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19세기』의 가장 중요한 대립축이었던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립은 민본정치와 반(反)민본정치의 대립으로 변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민본정치를 무너뜨리고 민본정치에 충실한 정치체제를 실현한 국가를 '민주지국'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번역자들은 『19세기』의 원래 문제의식이었던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대결을 민본주의와 반민본주의의 대결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세기 서양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 민본주의 담론의 맥락으로 흡수되고, 변형되었다. 이 과정은 앞서 상술한 대로 민본주의를 변형시키는 것이기도 했고, 그 변형의 과정에서 민본주의가 실현된 정치체제라는 의미에서 '민주'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5. 결론

19세기 말『태서신사람요』의 번역자들은 유교 지식인들에게 서양의 정치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고 있었다. 번역자들의 작업은 서양 정치사상과 유교 정치사상 사이에 놓인 깊은 강을 건너는 어려운 작업이었다. 그렇기에 번역자들은 유교 정치사상에서 서양 정치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누락, 착종, 변형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태서신사람요』의 원저인『19세기』는 자유주의와 전제주의의 필연적 대결과 자유주의의 궁극적 승리라는 관점으로 19세기 유럽사를 서술했다. 그러므로『19세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개념들이 매우 많이 서술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유교 정치사상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번역자들은『19세기』에 나온 자유주의적 표현들을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으로 번역했지만, 둘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맥락은『태서신사람요』의 독자들이 거의 의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탈각되었다. 입헌정부와 헌법 같은 자유주의 사상의 주요개념도 같은 길을 걸었다.

번역자들은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19세기』에 등장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도 번역해야 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유교 정치사상인 민본주의를 동원할 수 있었다. 민본주의의 핵심은 정치권력 정당성의 근거가 민심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 민심을 알기 위해 아래에서 위로 의견을 올리는 소통은 권장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번역자들은 이러한 민본주의 사상의 내용에서 19세기 서양 민주주의와 접목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

이에 번역자들은 19세기 서양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였던 보통선거제를 민심을 정치에 반영하는 하의상달의 수단이라는 식의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정당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민본주의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민심이라는 개념은 서양 민주주의와 유교 민본주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동했다. 즉, 서양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인 보통선거제는 민심을 반영하고 하의상달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민본주의적 맥락으로 변형되어 전달되었고, 반대로 민본주의 역시 민심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역사적 경험을 민주주의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면서 변형되었다. 민주주의와 민본주의 사이에 착종과 이중의 변형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가 통하는 면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모든 부분이 민본주의와 접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의미인 인민의 통치권력 장악은 민본주의가 수용하기 어려운 '인민에 의한 정치'였고, 그래서 해당되는 맥락은 대부분 누락되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민본주의의 착종과 이중변형은 계속 진행되었다. 본래 유교의 민본주의는 군주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지배층의 각성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본주의를 위한 정치체제는 상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번역자들은 『19세기』의 자유주의 대 전제주의의 대결을 민본주의 대 반민본주의의 대결로 전환해서 서술했고, 이 과정에서 민본주의를 실현한 정치체제를 '민주'라고 호명했다. 번역자들의 작업은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를 착종되도록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의미가 변형되어 유교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으며, 동시에 민본주의 사상도 자신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제도(선거제)와 정치체제('민주')가 갖춰지는 이중변형을 일으켰다.

이 글에서는 『19세기』에서 『태서신사람요』로의 번역과정을 통해 서양 정치사상의 초기 수용방식에서 유교 정치사상의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드러냈다. 자유주의 사상의 맥락은 유교 정치사상과 접점이 없었기에 많은 누락이 있었으며, 반면 19세기 서양에서 자유주의보다 더 급진적인 사상으로 평가되었던 민주주의는 오히려 민본주의와 접목되면서 더 큰 폭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본주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누락과 착종 그리고 이중변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심은 두 사상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오늘날 '민본'이라는 개념은 잊혀졌지만, '민심'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서 호명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변천이 남긴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말 중국에 거주하던 번역자들의 작업은 당대의 서양 정치사상과 유교 정치사상의 맥락적 접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書經』, 『孟子』

李提摩太·蔡爾康譯(2002), 『泰西新史攬要』,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Robert Mackenzie (1891), *The 19th Century: A History*, London, Edinburgh, and New York: THOMAS NELSON AND SONS.

Sidney Lee (1893), *Dictionary of National Biography, 1885-1900*, Vol. 35, London: Smith, Elder & Co.

논저

강명희(2022),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노관범(2000), 「1875~1904년 박은식의 주자학 이해와 교육자강론」, 『한국사론』 43,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진관타오·류칭펑(2010), 양일모·송인재·한지은 역, 『관념사란 무엇인가 2: 관념의 변천과 용어』, 서울: 푸른역사.

헬레나 로젠블랫(2023), 김승진 역, 『자유주의의 잃어버린 역사』, 서울: 니케북스.

유수진(2012), 「대한제국기 『태서신사』 편찬과정과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석규(1995), 「조선초기 민본사상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일모(2017), 「근대 중국의 민주 개념: 민본과 민주의 간극」, 『중국지식네트워크』 9,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정종원(2024), 「『태서신사』의 국제정치론과 신법론」, 『상허학보』 7, 상허학회.

허재영(2015), 「광학회 서목과 『태서신사남요』를 통해 본 근대 지식 수용과 의미」, 『독서연구』 35, 한국독서학회.

홍철기(2025), 「혁명 이후의 정치사상: 19세기 자유주의와 의회제」, 『서구지성사입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郭蔚然(2016), 「《泰西新史揽要》译作的变通与重构」, 『史学理论与史学史学刊』 14.
田中初(2009), 「游离中西之间的职业生存–晚清报人蔡尔康述评」, 『新闻与传播研究』 第11卷 第3期.
汪芳(2012), 「《泰西新史揽要》翻译的本土化取向」, 『安徽文学』 2012年 第12期.
姚彦琳(2021), 「晚清译著《泰西新史揽要》风行一时的原因探析」, 『文化创新比较研究』 33.
张昭军·徐娟(2005), 「文化传播与文化增殖–以《泰西新史揽要》在晚清社会的传播为例」, 『东方论坛』 2005年 第4期.
冯一下(2015), 「《泰西新史揽要》: 一部晚清历史教材传奇」, 『教育与教学研究』 第29卷 第9期.
杨华波(2024), 「"林君之口, 蔡君之手": 清末译史上的华人笔述者蔡尔康」, 『历史教学问题』, 2024年 第6期.
章晖·马军(1998), 「游离在儒耶之间的蔡尔康」, 『历史与人物』 1998年 第5期.

원고 접수일: 2025년 10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10월 3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11월 11일

ABSTRACT

The Reception of the Western Political Thought and *Taeseosinsaramyo* (*The 19th Century: A History*) in the Late 19th Century

Jung, Jong-w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a group of translators composed of Western missionaries and Chinese intellectuals produced *Taesosinsaramyo*, a translation of *The 19th Century: A History*, originally published in Britain. This translation project required them to bridge the deep conceptual gap between Western political thought and Confucian political philosophy. The translators had to identify resources within the Confucian tradition that could accommodate Western ideas and reorganize them in a coherent manner.

Most elements of Western liberalism were omitted, as liberalism shared few meaningful points of contact with Confucian political thought. By contrast, the translators identified affinities between Western democracy and the Confucian idea of *minbon* (people-oriented governance). Universal suffrage—central to Western democracy—was reframed in *minbon* terms as a mechanism for reflecting public sentiment and enabling bottom-up

*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Hanyang University

communication. Conversely, the *minbon* concept itself was transformed by incorporating concrete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historical practices drawn from democratic systems. The translators also recast the liberalism—absolutism conflict in The 19th Century as a struggle between *minbon* and anti-*minbon* forces, and they labeled political systems that realized *minbon* principles as "democratic." Their work intertwined democracy with *minbon*, altering the meaning of democracy as it was received by Confucian intellectuals, while *minbon* underwent a parallel transformation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specific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s) and political forms ("democracy").

Keywords Liberalism, Democracy, *Minbon* ideology, *The 19th Century: A History*, *Taeseosinsaramyo*